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1일, 박정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9.)

상정,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16.)

상정,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2.)

상정,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9.)

상정, 심사, 의결(수정)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의원)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계획 조정, 수시배정 및 배정유보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사전에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계획 조정, 수시배정 및 배정유보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사전에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수정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계획 조정, 수시배정 및 배정유보 시 미리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단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의2 및 안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43조제5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1조의2 및 안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69조의 제목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증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주요항목(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요항목을 말한다)”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주요항목”으로 한다.

안 제8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2(세입예산</u> <u>안의 재추계 및 보</u> <u>고 등) ① 기획재</u> <u>정부장관은 매년 1</u> <u>0월에 경제전망을</u> <u>실시한 후 제33조</u> <u>에 따라 국회에 제</u> <u>출된 세입예산안을</u> <u>재추계하여야 한</u> <u>다. 다만, 국회 예</u> <u>산결산특별위원회</u> <u>의 의결이 있는 경</u> <u>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u>② 기획재정부장관</u> <u>은 매년 10월 31</u> <u>일까지 제1항에 따</u> <u>라 실시한 세입예</u> <u>산안 재추계의 분</u> <u>석보고서를 국회</u> <u>소관 상임위원회</u> <u>및 예산결산특별위</u> <u>원회에 제출하여야</u>	<u><삭 제></u>

	<u>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안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u>	
<u><신 설></u>	<u>제35조의2(예산안의 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장·관·항(제21조제3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장·관·항을 말한다)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u><삭 제></u>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④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다
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1 –

<u><신 설></u>	1. 「지방교부세 법」에 따른 지방 교부세	<u>보고하여야 한다.</u> 1.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 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제51조의2(예비비 사용 내역의 분기 별 국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신 설></u>	<u>제55조의2(세입예산 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u>	<u><삭 제></u>

	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u>주요항목</u>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제69조(<u>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u> 동의) - ----- ----- ----- --- <u>주요항목</u> (제67	제69조(증액 동의) - ----- ----- ----- <u>주요항목</u> -----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요항목을 말한다)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5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입 징수액이 세입예산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

-----.

1. ~ 3.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② (생략)	<u>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